

안전한 먹거리 · 농업경쟁력 강화 총력

전주시, '건강한 시민, 지속가능한 농업, 독립경제도시 전주' 비전으로 농업 · 동물친화 분야 4대 추진전략 제시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를 확보하는 등 먹거리 지역 생산·소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돌이기를 조성하고 유기동물 재활센터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동물복지 향상에도 힘쓰기로 했다.

시는 28일 농업기술센터 신년브리핑을 통해 '건강한 시민, 지속가능한 농업, 독립경제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농업 · 동물친화 분야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4대 추진전략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지역 생산·소비 체계 구축 ▲농산물 생산 · 유통 활성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술보급 강화 ▲동물과



황권주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사람이 공존하는 동물친화도시 실현 등이다.

먼저 시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지역에서 생산 · 소비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 먹거리의 접근성을 높일 전주푸드 직매장 효천점을 추가로 조성하고, 학교급식과 공공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마나리, 배, 복숭아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해 농가의 부가가치 창출을 돕는 한편, 영유아와 주부, 남성 등 각계층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을 해 시민들의 바른 먹거리 소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집중한다. 이와 관련해서 ▲기분형 공익직불금 및 농민공익수당 지급 ▲중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청년창업농 · 후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농업인 용자 지원 ▲농산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여성농업인 생생카

드 지원 ▲농업인 공동급식 지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업으로 영농편의를 높이고 농업인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복안이다. 특히 젊은 인력이 농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청년농 명품브랜드 육성 및 스마트팜 지원, 청년 동아리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시는 또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술보급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품질 우량 딸기묘의 자체 생산과 공급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술력 향상을 위한 농가 맞춤형 현장 컨설팅과 농업인대학도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셜커머스 마케팅 교육과 1인 미디어 농튜버 양성교육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이 실시된다.

시는 이와 함께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분석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힘쓰고, 농작업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도시텃밭과 스톱샵, 옥상정원 등

도시농업 육성사업도 벌인다.

끝으로 시는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동물친화도시를 구현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한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누리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핏캣 및 동물보호 교육도 진행한다.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기동물 재활센터 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길고양이 급식소를 확대 운영하고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도 시행하기로 했다.

황권주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민 소득 보장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지역 생산·소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먹거리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평화동 다시 세우기 프로젝트: 지지케어

전주시, 2022년까지 8억7000만원 투입해 사업 추진

전주시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2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8억7,000만원을 들여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 일원에서 '평화동 다시 세우기 프로젝트: 지지케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 1단지 내 평화사회복지관과의 협약으로 진행되는 이 '지지케어' 사업에는 전주시 통합돌봄과와 평화1동 주민센터, 평화보건지소, 평화화출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 전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주시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LH 관리사무소 등이 참여해 총 9개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시는 '지역 연결망을 강화해 지역민이 지역민을 도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으로의 변화 도모'를 추진전략으로 세워 ▲지역 내 돌봄 공동체 육성 ▲그림세대발굴 · 예방 ▲지역 내 돌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등 3대 핵심목표를 실현해 나가게 된다.

우선 시는 사업의 첫 단계로 마을활동가로 나설 마을이웃단 30명을 구성한다. 마을이웃단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경미한 우울증과 불안, 무기력증, 알콜 의존증

이 있는 중장년층 지역 주민과 이들과 함께할 활동 주민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정신건강 상담과 원예 · 미술 · 공예 등 치유 프로그램, '내 이웃 알기'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또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밀키트 제작 및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자원순환 로봇을 운영하는 등 능동적인 마을활동가로 변모하게 된다.

또한 시는 주민 소통창구 역할을 맡을 공유공간 '온통(溫通)'을 조성해 마음이웃단 활동을 비롯한 소규모 동아리활동 지원 등 마을공동체 양성 및 지역 조직화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규 입주자 환영식 ▲명절음식 나눔 ▲마을벽화 그리기 ▲텃밭 · 나무심기 ▲마을정터 운영 등 공동체 강화 활동을 통해 평화동을 살고 싶은 마을로 변화시킬 예정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주민이 직접 주체가 되어 마을 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립의 역량을 키워 마을활동가를 양성할 것"이라며 "민 · 관 협력을 기반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평화동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전주시보건소, 총 7억1600만원 투입해 연중 추진

올해부터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에게 지급되는 의료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총 7억 1,600만원을 들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만성신장병(신장장애2급), 혈우병,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희귀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치료에 고가의 비용이 소요돼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의료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대상 질환이 당초 1,038종에서 1,110종까지 늘어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

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가 면제되며, 대상 질환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93개 질환), 인공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103개 질환), 간병비(월 30만원, 97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 등이 2년간 지원된다.

희망자는 신청서와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마음건강팀(063-281-63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만성신장병(64명), 루푸스(20명), 모야모야병(15명) 등 290명에 총 6억9,000만원의 의료비를 지급했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희귀질환 대상 질환이 늘어난 만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질환자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와 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8일 사회적경제기업 9곳의 제품을 지역마트 11곳에 입점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적경제와 동네마트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사회적경제기업-동네마트 상생협약 체결

전주시, 기업 제품 마트에 입점... 이윤 창출 · 판로 확대 기대

전주시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역마트에 입점시켜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돕기로 했다.

시와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김강환)는 28일 사회적경제기업 9곳의 제품을 태평마트 등 지역마트 11곳에 입점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적경제와 동네마트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을 통해 ▲전주농부협동조합 ▲제이퍼썸(주) ▲전주지역자활센터 한입푸드 ▲전주지역자활센터 한팜 ▲두메산골영농조합법인 ▲고은교팜협동조합 ▲전주또바기협동조합 ▲(우)

우리들냉식품 ▲(주)엑솔 등 사회적경제기업은 누룽지와 부각류, 냉동떡갈비, 냉동주물럭, 청국장 등의 제품을 지역마트에 입점시키게 된다.

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을 동네마트에 입점시킴으로써 동네마트는 새로운 제품을 활용해 이윤을 창출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은 판로가 확대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윤상 기자

허위 문서로 연구비 6억 쟁긴 대학교수 1심서 집행유예

허위 문서로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쟁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교수가 이전에도 허위 기재로 구입으로 발급받은 연구비 1억이 있지만, 연구비 대부분을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제재부과금을 반환한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량)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농과대학 A교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구원들과의 휴대전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서 "앞선 2017년에도 기차제를 산다고 속여 3,000만원을 편취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연구비를 사용한 것보다는 연구실 운영비나 활동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했고, 교육부 감사 이후 제재부과금으로 5억여원을 반환한 점,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교수는 2013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통해 정부로부터 연구비 6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앞서 A교수는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 저자로 기재하고 이를 자녀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전북대는 입시 공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A교수 자녀들의 입학률 취소를 바 있다.

/뉴시스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